

신빈곤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창업정책 (Entrepreneurial Policy)에 관한 연구

이주현
연세대학교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상대적 빈곤문제와 근로빈곤층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신빈곤현상을 살펴보고 이론적 체계 하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소위 창업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창업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도 줄어가는 취업기회의 대안이고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의 첫 단추가 되는 혁신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창업정책의 방향은 보호그룹에 속한 사람과 기업에게 혁신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혁신역량의 극대화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주제어: 신빈곤, 창업정책, 혁신역량]

I. 서론

통계청 2013년 3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3.5%이고 실업자 수는 88만 3000명으로 점차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청년 실업자 수는 아직도 34만 6000명으로 실업률(8.6%)이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사회가 제공하는 일자리 사이에 “미스매치” 때문에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질이 높은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 국내 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도 농림어업부문취업자와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8.8%, 36%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구직단념자도 9-10만명 수준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손민중, 2007). 특히, 상근근로자의 비중은 떨어지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높다는 것은 최근 노동시장의 질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황수경, 2010). 질 높은 고용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고용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국내 빈곤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영란, 2005).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되어 있지만 빈곤층에 속하는 근로빈곤층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계층이 발생하였다(노대명, 2002). 과거에는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근로능력이 있고 고용되어 있지만 빈곤층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홍경준, 2005).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근로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났었는데 직업의 불안정성, 직업기회의 감소, 부채의 증가 등이 빈곤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통계청 가계조사 소득분배지표에 의하면 2인 이상 중간소득(median income) 50% 미만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997년 8.7%에서 2009년 13.1%로 증가하였는데 빈곤노인가구의 증가와 아울러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이병희 외, 2010). 2009년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14.6%는 OECD 평균값 10.6%보다 높으며 근로빈곤층의 비율도 8.2%로 OECD 평균값 7.25%보다 높은 편이다(이병희 외, 2010). 따라서 국내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원인파악과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창업(entrepreneurship)에 대해 국내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창업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그리고 조직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창업은 새로운 조직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창출,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Audretsch & Thurik, 2001; 이운재, 2009; 이동주 외, 2011). 혁신적 창업¹⁾은 기존 업체보다 경제효율성을 높여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활동을 통해서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Schumpeter, 1950). 또한, 기존 기업도 사내에서 혁신적 창업활동을 통해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공정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의 효과로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배종태·차민석, 2009). 즉, 혁신적 창업은 기존 기업의 혁신성과 원가절감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조직의 창조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특히, 혁신적 창업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고용의 질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동 외,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 빈곤현상의 특징과 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창업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근로빈곤층의 경제 구조적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증가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떤 창업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1) 혁신이란 Schumpeter(1950)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성공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사업체를 뜻하는 용어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혁신적 창업은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한 창업을 의미한다.

II. 신빈곤현상의 발생과 원인

1. 빈곤의 개념

빈곤이란 무엇일까?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과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Ruggles, 1990; 홍경준, 2005). 하지만,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기본욕구충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필요한 자원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Townsend, 1979; 이성민·이수철, 2010). 왜냐하면, 결핍된 자원의 판단에는 사회적 인식이 작용되기 때문이다(Saunders, 2004).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지만 빈곤은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일반적으로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선(poverty line)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임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해결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Rowntree, 1901). 1995년 사회개발세계정상회담의 UN선언에 의하면 절대적 빈곤은 식량,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건강, 교육 및 정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필수품이 심각하게 박탈된 상태로 정의되고 있는데 2008년 세계은행이 제시한 절대적 빈곤 기준에 의하면 2005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루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도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등 생존 위협을 받는 인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초생활보호제도 등과 같은 공공부조 정책으로 세계은행 기준의 절대적 빈곤에 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박순일, 2005). 따라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빈곤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Townsend(1979)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은 사회적 인식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삶의 수준에서 배제된 상태로 정의된다(Saunders, 2004). Townsend(1979)는 빈곤계층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자원을 가짐으로써 사회의 정상적인 생활양식이나 관습,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상대적 빈곤의 측정을 위해 가

계예산방식, 태도접근법, 박탈접근법 등 다양한 측정방법이 사용되었다 (Veit-Wilson, 1998; 이상일, 2008). 간단하게는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으로 정의하는데 OECD나 많은 연구에서 중간소득의 40-60% 이하 혹은 소득분포기준으로 10-20%를 빈곤층으로 규정한다(Nolan & Whelan, 1996; 이성민·이수철, 2010). 중간(median)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상대적 빈곤을 측정할 때 평균 소득을 사용할 경우 상위 고소득층의 높은 소득에 영향을 받아 높게 설정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 우리나라 신빈곤현황

1960년 이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100달러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절대빈곤국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물질적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빈곤과 관계없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고용불안과 산업구조의 재편 등으로 새롭게 빈곤층에 빠진 계층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신빈곤 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박순일, 2005; 구인회, 2006). 지니계수는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통계학적 지수이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다면 지니계수 값이 0이 되고 한 명이 전체소득을, 나머지가 소득이 없다면 지니계수 값이 1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는 지니계수가 0.266 이었으나 IMF 이후 0.293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이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간소득 50%를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제통계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 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도 지니계수와 비슷하게 IMF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200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 연도별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빈곤율 추이

분배지표별	1992	1996	1998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지니계수	0.254	0.266	0.293	0.298	0.29	0.283	0.298	0.316	0.32
5분위배율	3.71	4.01	4.78	4.93	4.66	4.66	4.94	5.79	6.11
상대빈곤율 (중간소득 50%기준)	7.4	9.1	11.4	12.2	11.3	12.1	13.6	14.9	15.4

출처: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도시2인이상 소득기준

〈표 2〉 주요국의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 비교

국가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영국	미국	OECD 전체
지니계수	0.259	0.324	0.293	0.295	0.329	0.314	0.476	0.342	0.378	0.314
상대빈곤율	8.794	11.734	7.2	8.32	14.932	14.3	18.42	10.312	17.046	11.087

출처: OECD.Stat 2000말 기준 자료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상대빈곤율(중간소득 50% 기준)은 OECD 평균값보다 훨씬 높아 불평등 정도보다 우리나라 빈곤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멕시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OECD, 2007).

근로빈곤층이란 일을 하지만 가난함을 벗어나기 힘든 개인이나 가족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에는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으면 일감을 구할 수 있었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채, 불안정한 고용과 저성장으로 인해 근로능력은 있거나 취업을 하고 있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생겼고 이들을 근로빈곤층이라고 한다(김영란, 2002).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마다 근로와 빈곤의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근로능력의 유무를 근로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연구도 있는 반면 취업여부 혹은 근로소득의 유무를 근로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김수연·허선, 2010). 또, 빈곤층을 판단할 때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도 있는 반면 상대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도 있다(김수연·허선, 2010).

백학영·구인회(2010)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의 빈곤율(3.3%)에 비해 실

업자 빈곤율(29.9%), 비경제활동 빈곤율(15.6%), 자영업 빈곤율(14.8%), 비정규직근로자 빈곤율(11.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저학력, 노년층, 단순노무, 서비스 및 도소매업 근로, 농업·임업 종사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빈곤비율도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채구목, 2003).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고연령 가구주, 낮은 학력수준, 비임금 근로자, 짧은 취업기간, 자영업주가 높은 근로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탈출확률은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구 내 취업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호 외, 2005).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고연령, 저학력, 이혼, 별거, 사별, 비근로, 전월세 가구의 빈곤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김교성, 2010).

기업수준에서 IMF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olfson지수와 ER지수를 통해 분석해봤을 때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양극화에 비해 제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매출과 이익 양극화가 훨씬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황선용·신우용, 2012).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양극화는 이들에 근무하는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금재호, 201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위상지표의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인 임금격차가 2003년 60.9이었던 것이 2009년 56.7, 2011년 52.5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2003-2007년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폐업률이 높기 때문에 생존기업의 평균으로 구해지는 영업이익률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 3〉 연도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차이 및 임금격차 추이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영업이익률 차이	3.6	2.8	2.4	1.9	3.1	1.9
임금 격차	60.9	57.6	58.4	56.7	53.8	52.6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롯데리아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약7억

8천만 원이고 도미노피자는 약 5억6천만 원, 파리바게뜨는 약6억9천만 원, 놀부보쌈은 5억8천만 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매출액이 1억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81%로 대부분 창업자들은 영세한 저숙련 창업을 선택하고 빈곤계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정호, 2012).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취업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경우가 1.6%로 자영업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경우의 3.5%보다 항상 높다(지은정, 2013). 또, 자영업자의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율(3.5%)이 상용근로자(1.0%)는 물론 임시일용직(3.0%)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은정, 2013).

이제까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현상이 단순히 개인, 가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화된 모델을 통해 상대적 빈곤 개념의 신빈곤²⁾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창업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신빈곤 문제의 발생원인

세계화(Globalization)란 용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이다. 하지만, 세계화의 개념과 이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세계화를 해외무역과 투자확대와 같은 경제적 교류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국제화와 차별하여 경제적 교류는 물론 사회문화적 교류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방화하는 것으로 정의한 연구도 있고 법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2) 신빈곤 문제는 상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비정규직 근로, 만성 실업 등과 같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경력 및 지식축적 불가능으로 인한 노동빈곤,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배제,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소외 등으로 인한 복합적 빈곤, 빈곤층에 대한 공간적 격리와 아울러 발생하는 사회적 격리로 인한 빈곤층의 심리적 고립 등은 신빈곤을 접근하는 다양한 접근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장세훈, 2005). 저자는 신빈곤 문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신빈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를 영미식 국제 표준으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규정한 연구도 있다(김세원, 1994). 제품 및 자본의 교류확대로 인해 세계가 밀접한 의존관계를 갖게 되는 통합된 생활단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 연구자들도 많다(Dicken, 1992). 그렇다면 과연 세계화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무엇일까?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타결로 1995년 1월에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947년에 시작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의 한계인 보호무역, 비관세장벽, 국제무역규범의 미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강력한 기구이다. 이 국제기구의 목표는 모든 국가가 차별 없는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조정하여 자유무역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세계화는 통일된 국제무역규범 하에서 국제적 교역이 확대되고 국제적 협력과 분업구조가 확립되어 경제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McGrew, 1992).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적 무역규범과 무역장벽의 철폐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과 무역활성화를 위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통 및 무역, 통신수단의 발달이 모두 중요한 요인이 된다(Friedman, 2005).

J. Buchanan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세계화는 경제적 후퇴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다.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세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Adam Smith가 말한 시장 확대가 분업과 전문성을 키우고 이것이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Buchanan & Yoon, 2002). Adam Smith는 노동자 혼자서 모든 공정을 다하게 되면 한사람이 편을 하루에 20개밖에 못 만들지만 여러 사람이 협동과 분업을 하면 10명이 하루에 4만 8천여 개의 편을 만들 수 있다는 예를 통해 분업과 전문성이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일깨웠다. 하지만, Adam Smith는 비록 분업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시장 확대가 없다면 분업과 생산성의 증가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장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효율의 증가가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없다면 대량생산자가 시장

에서 효율적 생산자로 남아있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규모의 확대가 사회적 분업과 전문성 확대,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선행조건이 된다고 Adam Smith는 지적하였던 것이다.

시장규모의 확대는 무역장벽의 철폐와 같은 법과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무역 및 교통수단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근대적 거대기업이 발생하게 된 것은 철도가 건설된 이후라는 것은 교통수단의 발전이 시장규모 확대와 효율적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Friedman, 2005).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화는 법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국가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비경제적 장벽을 제거해 교역을 증대시키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계화로 인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세계화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투에서 국내 챔피언보다 세계챔피언이 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세계화된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는 것은 세계화 이전과 비교해 훨씬 어렵다. 따라서, 지역과 국가가 획기적 조치를 취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세계화의 결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수는 줄어들고 이들이 고용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된 인력도 줄어들게 되고 실업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저자는 이론적 논의목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혁신그룹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보호그룹으로 분류하였다³⁾. 또, 혁신그룹에 속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고용되어있어 혁신기업의 열매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혁신그룹으로 분류하고 이에 속하지 못해 세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을 보호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 무역과 교역이 증가하게 되면 혁신그룹에 속한 기업은 판

3) 혁신그룹과 보호그룹의 구분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권투에서 세계챔피언그룹(체급별 세계챔피언을 포함)과 챔피언이 아닌 권투선수그룹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초경쟁(hyper-competition) 하에서는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승자가 되지 못하면 패자에 준하는 상태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추상적 분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초경쟁과 승자독식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저자와는 달리 기업수준의 논의에 머물고 있거나 보호그룹보다는 혁신그룹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혁신그룹을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매가 신장되고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고 혁신그룹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개인의 소득은 이에 비례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반면, 보호그룹에 속한 기업과 개인은 세계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혁신그룹과 보호그룹의 소득격차는 증가하게 된다. 즉, 세계화로 인해 혁신그룹의 소득은 훨씬 증가하게 되는 반면 보호그룹의 소득은 증가하지 못해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게 되는 것이다(Potter, 1992; Haass, 1998).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199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임금불평등과 소득불균형이 나타났다(장지연·이병희, 2013).

뿐만 아니라, 무역장벽이 있을 때 국내에서 나름 경쟁력을 갖고 혁신그룹으로 분류되던 기업 중 다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보호그룹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이미 한번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챔피언보다 세계챔피언이 훨씬 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보며 된다. 따라서, 과거 혁신그룹에 속했던 기업들이 세계화 시대에는 보호그룹에 속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이전 혁신그룹에 투자했거나 고용되었던 개인이 세계화 이후 보호그룹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몰락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경제와 노동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신빈곤층 문제는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많은 조사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후 지난 10여 년 동안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 소득양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확대되었고 부실 중소기업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신동균·전병유, 2005; 신동균 신관호, 2007; 황선웅·신우용, 2012).

Ⅲ. 창업정책

1. 창업정책의 방향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혁신그룹과 보호그룹 간의 경제적 양극화가 확

대된다고 해서 무역확대와 세계화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 방향이 되기 어렵다. 무역과 교역을 거부하고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경제체제는 비효율과 낙후를 가져온다는 것은 소련, 중국, 동구권, 북한 등을 비롯한 공산주의의 실패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또, 극단적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처럼 “작은 정부”만 지향하여 국가가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계화는 궁극적으로 소수의 혁신그룹과 다수의 보호그룹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또, 만약 국가가 보호그룹에 속한 기업과 개인이 혁신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세계화로 인한 보호그룹에 속한 기업과 개인의 증가는 빈곤계층의 고착화는 물론 장기적 국가잠재력조차 잠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Cameron, 1978; Rodrik, 1998).

국가와 지역경쟁력은 국가 혹은 지역에 속한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총합이다. 모든 기업과 개인이 혁신그룹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씨앗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 그렇지 못한 국가나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을 것이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교육을 받지 못해 혁신그룹의 일원이 될 가능성의 씨앗이 상실된 개인이 증가할수록 필연적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또,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키우지 못하는 보호그룹에 속하는 기업이 늘어난다면 지역과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은 비용절감과 효율성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혁신그룹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개인과 기업의 가능성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케인즈 이론에 근거한 수정자본주의 하에서 국가는 보호그룹에 속한 개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과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전통적 사회안전망과 복지지원정책은 경제적 양극화를 축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노동의욕을 감소시켜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발생한다(윤도현, 2003). 1970년대 말 미국도 단순히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본적 소득보장을 지향하는 전통적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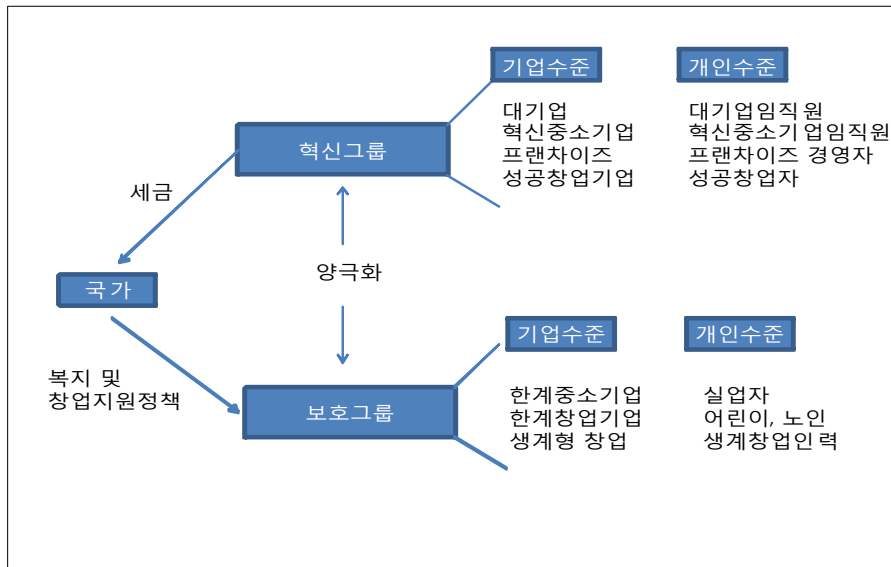
정책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김성한, 1995). 보호그룹에 속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는 기업과 개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할 바람직한 창업정책(entrepreneurial policy)의 방향은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은 오늘날 개인과 기업에게 무한경쟁 하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무한경쟁의 정글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게 되고 재기의 발판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자는 지금 국가에 필요한 이상적인 “창업정책”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 소위 보호그룹에 속한 개인과 기업의 가능성의 씨앗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업정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보호그룹에 속한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여 자신이 가진 혁신의 씨앗을 육성, 발전시켜 혁신그룹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하여 이들의 발전을 기반으로 고용과 협력 중소기업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위 낙수효과에 의한 국가발전 전략에 의존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분업화, 자본개방, 대기업의 이익극대화 정책 등으로 인해 낙수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오늘날 기술개발과 혁신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고 다양한 기술, 지식 및 산업의 공진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혁신체계 없이 특정 기업에만 의존한 기술개발정책으로는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손동원, 2012). 국가가 대기업과 혁신중소기업 위주의 지원만 고집한다면 경쟁과 공생을 통한 다양한 혁신기술이 개발되기 어려울 것이고 소외된 한계중소기업이 장기적 성장기반이 되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 또한,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소수의 혁신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효율성 위주의 지원정책은 가정과 사회유지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

다. 이에 반면 단순 복지정책은 지식축척 및 혁신을 유도하지 못해 개인과 사회의 자생력과 성장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과탄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기 어렵다.

〈그림 1〉 창업정책의 구도 및 체계



본 논문에서는 기업과 개인수준에서 보호그룹의 경쟁력을 높여 혁신그룹이 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과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기업수준에서 보호그룹에는 한계중소기업, 한계창업기업, 생계형 창업 등이 존재할 수 있는 반면 혁신그룹에는 대기업, 강소혁신기업, 성공 프랜차이즈업체, 성공 창업 등이 있다. 개인수준에서 보호그룹에는 실업자, 어린이 및 노인, 그리고 경쟁력 없는 창업자 등이 있을 수 있는 반면 혁신그룹에는 대기업 및 강소혁신기업 임직원, 성공 프랜차이즈 창업자, 성공창업자 등이 있을 수 있다. 창업정책의 방향은 보호그룹에 속한 개인을 대기업 혹은 강소혁신기업의 임직원, 프랜차이즈 창업자 및 성공 창업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보호그룹에 속한 기업을 대기업, 강소혁신기업, 성공 프랜차이즈 및 성공창업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2. 한계 중소기업 및 창업자를 위한 창업정책

한계기업이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금융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내 5인 이상 기업 중 한계기업이 2009년 3만1천여 개에서 2012년 5만8천여 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국은행(2012)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은 600 여개 중 6-10%인 40-60여 곳 정도가 한계기업인 반면 중소기업은 약 900-1000여개 가운데 12-18.2%인 100-170여 곳이 한계기업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한국은행 통계는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더 작은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2007년 미국 내에서 66만 여개 신생기업이 창업되고 59만 여개가 퇴출되었다고 한다. 또, 미국 내에서 1명 이상 고용기업은 창업 후 2년 내 약30%, 5년 내 약50%, 10년 내 67%가 퇴출되었다고 한다. 2012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 한국 내에서 80만 여개가 창업되고 2010년 65만 여개가 소멸되었다. 또, 동 조사에서 창업 후 1년 내에는 37.5%, 2년 내 50.9%, 3년 내 58.8%, 4년 내 64.1%, 5년 내에는 69.8%가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이 부실화되고 한계기업, 퇴출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능력부족, 자금조달 및 관리와 외부환경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영자의 관리능력부족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Cadden & Lueder, 2012). 부족한 자금조달문제와 아울러 체계적 전략계획, 마케팅 전략, 의사소통, 현금흐름관리, 인사관리 등의 부재는 많은 중소기업 및 창업 실패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제는 외부로부터 단순히 생산시설을 도입하여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전략을 도출하고 소비자 욕구에 기반을 둔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 마케팅, 전략 등과 같은 경영학의 학습과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창업주의 학사전공이 경영학 혹은 경제학인 경우는 17.5%에 불과하다. 또, 그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육내용도 영업마케팅, 생산품질관리 등과 같은 경영학 관련 분야가 아주 많

왔다. 따라서, 한계 중소기업 임직원 및 한계 창업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경영관리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날 기업은 성공하기 위해서 소비자 욕구의 변화와 경쟁기업을 분석하여 틈새시장을 찾아내어 혁신적 제품개발과 독점적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을 통해 제품기능 및 품질, 생산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최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내부적 애로사항으로 자문위원들의 29.3%, 중소기업인의 16.4%가 독자적 기술과 제품 경쟁력 강화(29.6%)를 들었다. 하지만, 2011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수준이 세계 최고대비 74.8%로 아직 격차가 있다. 특히, 디자인, 개발기술 사업화, 제품(상품)기획, 신기술(신제품)개발 능력이 제조(가공), 제품설계, 생산관리, 유지보수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과 2011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기술개발 동기 중 성능 및 품질향상이 28.2%에서 39.4%로, 시장점유율 확대 및 유지가 10.3%에서 14.1%로, 제품 고급화 및 다양화가 11.7%에서 12.7%로 증가한 반면 생산비 절감은 14.7%에서 10.3%로, 수입품 대체 및 국산화는 12.4%에서 3.2%로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점차 수입품 대체나 비용절감보다 높은 품질과 성능향상, 제품개선 및 개발로 관심이 옮겨간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동 조사에 응답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 자금(33.7%)과 기술개발 인력확보(23.6%)는 많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1%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평균 영업이익률은 4.4%에 불과한 실정이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많은 판매가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라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똑같은 기술개발을 통한 혜택이 낮은 편이라 기초 혹은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 2012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기업당 연구비가 대기업의 경우 629억 원에서 996.6억 원으로 1.6배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의 경우는 5.1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측정하는 R&D 집약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3.03%에서 3.71%로 대기업의 1.94%에서 2.43%보다 높았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매출에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김용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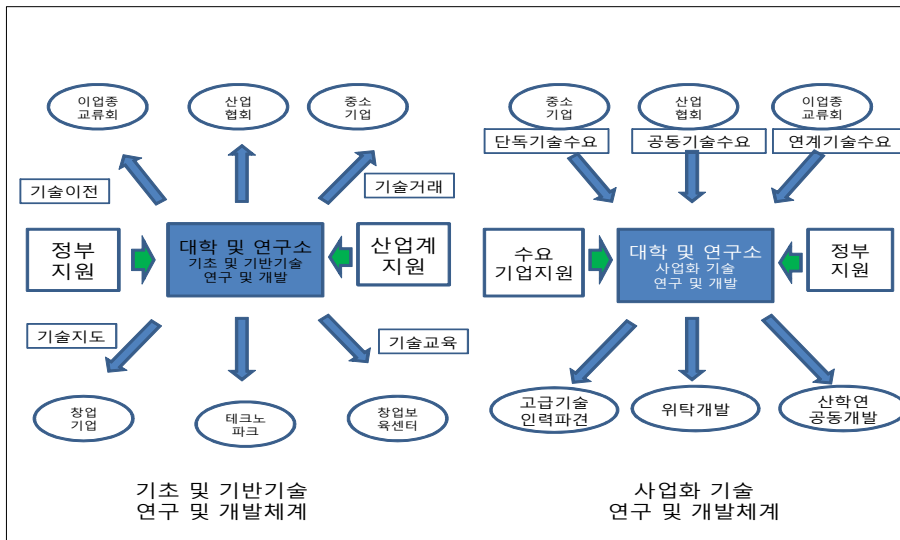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개발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고급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등과 같은 표면적 이유와 아울러 경력개발 상 어려움, 낮은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청년실업이 만연한 상황 하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현재 중소기업의 학사연구원은 6만4천여 명, 석박사연구원은 2만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학사 연구원의 수는 2005년 3만4천여 명에서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석박사 연구원의 수는 1만8천여 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따라서, 고도의 연구개발을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기술개발의 혜택은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식의 파급효과로 타 기업과 사회전체에도 혜택을 주는 공공재적 성격을 보이게 된다(Griliches, 1979).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경우 공유재의 비극으로 불리는 현상이 기업의 기술개발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기업이 필요한 것보다 적게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파급효과가 큰 기초 연구 및 기반기술의 경우 국가가 연구비를 보조하거나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전략으로 대학, 연구소 등과 같은 외부기관을 활용하고 동종 업계 내의 공동기술개발과 이업종 기업 간의 기술 제휴를 제시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하고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독자적 기술개발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외부 연구비를 이용하거나 공공 연구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독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초 및 기반 기술은 국가의 지원 아래 외부 연구기관 주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반면 제품개발, 생산기술 등과 같은 사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개발은 기업내부에서 진행하거나 중소기업 지원 하에 외부 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초 및 기

반 연구개발을 대학 및 연구소를 통해 국가주도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원하는 기업 누구나 기술 이전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연구 및 기술개발 체계



3. 생계형 창업자를 위한 창업정책

소상공인진흥원이 2011년 발표한 “소상공인통계집”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268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52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를 말하고 나머지 업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일컫는 법적인 개념이다.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 이하가 58.3%, 400만원-1000만원이 2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순이익 측면에서 100만 원 이하가 57.6%, 100만원-200만원이 23.4%로 낮은 매출과 소득에 시달리는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소득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276.9만원)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못 미치는 낮은 수준

인 것이다(이덕연, 2011). 또, 동 설문에서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17.2%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80.2%)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자영업자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005년 7.2%, 2006년 6.2%, 2007년 4.6%, 2008년 3.6%, 2009년 3.5%로 계속 줄고 있지만 취업빈곤층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05년 63.9%에서 2009년 47.5%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5년 36.1%에서 2009년 52.5%로 계속 증가하였다(지은정, 2013).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낮은 소득의 생계형 창업자가 많은 것인가? 우선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인 창업자가 60.2%에 달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창업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소상공인통계집, 2011).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에 비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급히 창업했다는 것은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입지선정 등에 대해 연구,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력이 고졸이하로 낮을 경우 대졸 이상 자영업자보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취업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지은정, 2013). 학력으로 평가받는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창업은 학력에 의해 평가받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배움에 대한 자세가 창업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창업비용이 3천만 원 미만이 33.5%, 3천만 원-6천만 원인 경우도 32.6%에 달할 정도로 영세한 창업자가 많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소상공인통계집, 2011). 물론, 창업투자비용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 및 서비스개발, 입지, 인테리어 등 꼭 필요한 투자를 아낄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도·소매업(28.5%), 숙박 및 음식점업(21.0%) 등의 업종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문진웅·전인우, 2011). 주5일 근무제 및 국민소득향상으로 이들 업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자금과 접하기 쉬운 저숙련 기술 등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한 낮은 매출과 순이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다(Schulze Buschoff & Schmidt, 2009; 반정호, 2011; 금재호, 2011; 지은정, 2013). 또, 최근 대형 할인점 및 프랜차이즈 업체의 활발한

진출로 이들 업종에서 독립점 형태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경쟁력을 갖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계약불공정, 상권침범, 부실가맹점 본사 등과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규제와 제도로 해결해야 가맹점 창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김원규·우석희, 2010; 임채운 외, 2010; 강창동 외, 2012). 하지만, 비록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편의점, 치킨점, 커피전문점, 빵집, 패스트푸드 등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경제 하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 이들 업체들이 진출함으로써 해서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강창동 외, 2012). 생계형 창업자에 대한 대책은 이들이 가진 치명적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정책적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생계형 창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창업자들은 시장조사를 통해 환경을 분석하고 틈새고객을 찾아내고 경쟁자들에 비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상권분석을 통한 입지선정과 합리적인 가격, 촉진 및 유통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창업선도대학을 설립하여 교육, 창업지원, 사후관리를 맡기고 있다. 현재 창업선도대학에서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일반인에 대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경영학 관련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과 기자재를 제공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경영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산업 및 창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실무관련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 맥도널드(McDonald)에서는 1961년 Fred Turner Training Center라는 햄버거 대학을 설립했으며 한국에서는 제네시스가 치킨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조리법, 손님 접대법, 매장배치, 매장관리, 인사관리 등과 같은 강좌를 교육한다(이수범·함성필, 2000). 물론, 가맹점 창업교육과 저자가 생각하는 창업교육은 똑같지는 않지만 맞춤형이고 실무적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창업분야가 존재하지만 창업과 관련된 현장 중심적 지식 및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에서 사회의 다양한 창업분

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교육하는 창업연구 및 교육센터를 세우면 해당 산업 발전과 창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기존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창업 이론 및 실무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이론 및 실무 전문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막국수 창업센터에서 국내 다양한 막국수의 생산방법, 조리법 등을 정리하고 보다 질 높은 막국수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 교육한다면 예비 창업자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막국수 업체를 창업할 수 있고 이는 곧 막국수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발에 관해서도 연구,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맹점 창업센터가 대학에 설치되어야 한다. 오늘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혁신적 창업을 사회에 빠르게 전파시키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조준상, 2011).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프랜차이즈 본사경영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다수의 개발업체가 필요하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경영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정보시스템, 물류관리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 등의 체계적 연구와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구병모·여기태, 2011). 다양한 가맹점 본사 간의 창업시장 내 치열한 경쟁은 창업자들을 위한 가맹점 창업시장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센터의 체계적인 교육은 창업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지식이 준비된 상태에서 가맹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경영에 필요한 기반 기술과 사업화 방법에 대한 연구 수행은 이미 경쟁력 있다고 평가받는 창업아이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프랜차이즈화 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4. 실업자, 노인, 어린이를 위한 창업정책

창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실업자, 노인, 어린이를 재교육 혹은 교육하여 혁신기업에 취업하거나 경쟁력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은 실업자, 노인, 어린이를 혁신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 혹은 혁신적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렇

다면, 혁신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이고 혁신적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혁신이란 기존의 것보다 가치 종합적 측면에서 우수하여 시장경쟁에서 승리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말한다(Schumpeter, 1950). 혁신은 공급자 혹은 자원, 생산, 시장가치, 환경적 측면을 포괄한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이며 최종적 판단은 시장경쟁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비디오테이프 표준전쟁에서 우수한 기술의 베타방식이 결국 혁신적 제품이 되지 못한 경우처럼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서만 우수한 것이 아니며 시장경쟁에서 이긴 열등한 VHS 기술이 혁신인 것이다. 또, 기술과 지식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제는 한 번의 혁신으로 몇 년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던 시기는 지나갔다. 끊임없는 혁신과 자기발전만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준비된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것에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 낮은 교육예산과 많은 학생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교육, 지필시험위주의 효율적 평가방식을 선택했었다. 비록 최근 많은 비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성공적인 산업발전을 이룩한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수십 년 전과 현재 교육을 비교해 봤을 때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의 교육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선진국 교육이 반드시 쫓아가야 할 모델은 아닐 수 있지만 혁신경제를 오랫동안 유지한 선진국의 교육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인 S기업 홈페이지에는 바람직한 인재 상으로 창의적 인재, 도전적 인재, 글로벌 인재, 전문인재가 소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발상, 목표의식과 위기의식, 모험정신과 추진력, 경쟁심, 외국어와 리더십, 전문성과 시장 감각 등이 나열되어 있다. 초일류기업이 추구하는 인재 상에 관해서는 지식근로자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Peters & Waterman, 1984). 지식근로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교육 그리고 경험을 가진 근로자이며 이들의 역할은 지식을 창조, 전파, 적용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Davenport, 2005; 장영철 외, 2010). 혁신자를 신지식인으로 부른 때도 있었던 것을 생각

하면 혁신자도 지식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Tissen et al.(1998)은 지식근로자가 필요한 역량을 학습역량(찾기(Sourcing), 질문(Questioning), 감지(Sensing)), 개선역량(분석(Analyzing), 창조(Creating), 반추(Reflecting)), 사회역량(네트워킹(Networking), 팀 워킹(Team working), 대화(Dialoguing))으로 나열하였다.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최근 창업자의 특징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세 가지 특성을 기업가지향성이라고 해서 연구하고 있다. 즉, 공통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진취적으로 신제품 혹은 서비스 개발에 도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습역량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과서가 주어지고 이를 얼마나 학습하였는가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습 목표와 학습동기 설정, 주제적 문제 설정, 필요한 배경지식 찾기, 창의적 문제해결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손충기, 1993).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혁신적 인재나 성공한 혁신창업을 이룰 수 있는 인재는 기존 제품 혹은 서비스를 넘어설 수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보편화된 교육내용을 완벽히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수월성 그리고 창의성이 없으면 혁신인재가 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보편화된 교육에만 치우쳐져 있고 자율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은 아직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를 졸업하면 학습과 평가가 끝나는 시대는 지나갔고 취업한 이후 혹은 창업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고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혁신 인재에게 교육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문제의식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학생들에게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성공가능성이 높고 혁신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흥미 있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연구, 학습하여 전문성과 수월성을 쌓아야 한다. 물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으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쌓았다고 해서 반드시 혁신인재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특정분야의 전문성과

수월성은 혁신인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를 기초로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혁신인재의 핵심역량으로 마케팅적 감각과 전략적 판단력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이 요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객관적으로 유망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흥미와 관심이 없다면 학습과 자기개발에 필요한 열정과 동기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아주 늦게 자기 진로를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거나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혁신은 예측하기 어렵고 미리 혁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혁신인재가 되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정확히 학습방향을 조언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다. 단지, 어릴 때부터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개발에 매진한다면 혁신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학습자세와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수월성은 반드시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혁신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어린이, 학생시절 경제, 경영교육에 대해 금기시하고 많이 가르치지 않았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학습이 중요한 시기인 어린 나이에 장기적 성장의 바탕이 되는 학습과 자기개발을 등한히 하게 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의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 경영교육을 받지 못해 어른이 되어서도 금융개념이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 및 경제개념을 갖추는 것은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경제사회적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창업은

말할 것도 없고 혁신적 제품 혹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도 사업에 대한 개념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혁신인재가 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경제, 경영 및 창업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창업과 혁신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교과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상대적 빈곤문제와 근로빈곤층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빈곤현상⁴⁾을 살펴보고 이론적 체계 하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소위 “창업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창업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도 줄어가는 취업기회의 대안이고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의 첫 단추가 되는 혁신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시한 바람직한 창업정책의 방향은 사회적 통합을 통한 혁신역량의 극대화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다.

본 논문의 이론적 가정은 모든 개인과 기업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과 기업이 가진 가능성을 키우지 못하는 국가는 패망할 수밖에 없고 개인과 기업이 가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발전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론을 전개하였다. 저자가 제시한 창업정책은 개인과 기업이 가진 잠재성을 키우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제시된 다양한 주체에 대한 해결책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이론적 공헌은 혁신그룹과 보호그룹을 기반으로 한 비교적 간단한 이론적 모형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창업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4) 본 논문에서 저자는 혁신그룹과 차별화되는 보호그룹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호그룹과 빈곤 계층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보호그룹은 빈곤 계층과 마찬가지로 빈부격차의 심화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그룹입니다. 또, 보호그룹은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교통 및 무역의 발전이라는 환경의 변화로 점차 수가 증가하며 상대적 빈곤정도가 심화되고 국가의 복지수혜는 받지만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오기 어려운 굴레라는 측면에서 절망의 빈곤인 빈곤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창업정책은 보호그룹과 빈곤 계층과의 유사성만큼 빈곤 문제를 타개하는 정책적 함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창업정책은 보호그룹에 속한 사람과 기업에게 국가가 혁신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창업정책은 복지정책이나 단순 일자리 제공과는 차별화된 의미가 있다. 첫째, 창업정책은 교육 및 기술지식의 제공을 통해 인적자원의 개발을 지향하고 경력 및 지식축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경쟁력을 키우고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노대명, 2002; 장세훈, 2005). 둘째, 창업정책은 보호그룹에 속한 개인과 기업을 사회적 낙오자로 무시하지 않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주체로 대접하고 지원한다(이남희, 2004; 류정순, 2003). 셋째, 국가적으로 혁신그룹과 비슷하게 차별 없이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여 혁신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나 심리적 고립 문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다(노대명, 2002; 장세훈, 2005). 넷째, 장기적으로 혁신그룹을 키우고 보호그룹을 축소시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다.

넓은 주제를 하나의 체계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창업정책을 제시하다보니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저자는 상대적 빈곤과 근로빈곤층의 발생 원인을 세계화로 단순화하였다. 물론, 정보통신사회의 발전, 중국, 인디아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의 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빈곤층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정된 지면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 빠진 부분이 있을 것이다. 둘째, 저자는 혁신그룹과 보호그룹으로 나누었지만 이것은 이론적 단순성을 위한 편의적 발상이다. 혁신그룹과 보호그룹으로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 계층도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처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저자가 제시한 창업정책은 매우 큰 주제들로 심도 있는 분석이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보완은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어야 되는 숙제를 남긴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창동·신건철·장재남. (2012).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통연구」, 17(5): 1-23.
- 구병모·여기태. (2011). 물류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의 성과향상 및 관계 유지 강화를 위한 요인도출에 관한 연구: 국내 택배산업을 중심으로. 「물류학회지」, 21(1): 31-50.
- 구인희.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금재호. (2011).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13(2): 131-168.
- 김교성. (2010).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정책」, 17(1): 215-240.
- 김세원. (1994). 국제 경쟁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노화준·송희준 공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서울: 나남.
- 김수연·허선. (2010). 준 고령 근로빈곤층과 청장년 근로빈곤층의 빈곤결정 요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47: 375-398.
- 김영란. (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41-69.
- 김용희. (2012).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지원 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ssue paper 2012-03」.
- 김원규·우석희. (2010). 일본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법적 규제. 「한양법학」, 29: 281-313.
- 노대명. (2002).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58: 78-93.
- 문진웅·전인우. (2011). 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1): 241-266.
- 박순일. (2005). 한국 사회안전망의 위치와 적정수준 및 구조의 모색. 「한국사회정책」, 12: 137-192.
- 박 동·김안국·황규희·이종선·이봉주. (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기본연구 2010-10」. 직업능력개발원.
- 반정호. (2011). 자영자 가구의 소득실태와 변화: 1990-2010년. 「월간 노동리뷰」, 10월호: 19-32. 한국노동연구원.

- 반정호. (2012).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임금 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2(1): 29-56.
- 배종태·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109-128.
- 백학영·구인희. (2010).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0(3): 87-117.
- 손민중. (2004).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원인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7호」.
- 손충기. (1993). 개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 「교육학연구」, 31(2): 37-49.
- 신동균·전병유. (2005).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28(3): 77-109.
- 이덕연. (2011). 소상공인 문제와 소상공인 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연세공공가버너스와 법」, 2(2): 27-55.
- 이동주·이윤보·김종운. (2011). 창업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3(2): 73-92.
- 이병희·홍경준·이상은·강병구·윤자영. (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KLI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일. (2008). 상대적 박탈의 논리와 소득의 차원을 비교적으로 적용한 빈곤선의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185-225.
- 이성민·이수철. (2010). 빈곤의 대안적 개념화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9(2), 73-92.
- 이수범·함성필. (2000). 맥도널드의 성공전략, 경쟁방법론과 재무성과에 대한 분석. 「외식경영연구」, 3(2): 171-189.
- 이운재. (2009). 기업가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증분석. 「중소기업연구」, 31(2): 63-84.
- 임채운·이수·이호택. (2010). 외식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지역제한이 가맹본사의 브랜드 확장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15(5): 217-235.
- 장영철·신차훈·이정용. (2010). 지식근로자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경영사학」, 25(4): 265-305.
- 장지연·이병희. (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71-109.

- 정진호·황덕순·김재호·이병희·박찬임. (2010).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KLI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조준상. (2011). 프랜차이즈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파리바게뜨 사례. 「KBR」, 14(3): 215-250.
- 지은정. (2013).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5(1): 147-174.
- 채구묵. (2003). 비정규 근로자의 인구학적 및 직업 산업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58: 276-310.
-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142.
- 황선웅·신우용. (2012). 우리나라 제조산업 내 기업규모에 따른 소득양극화 및 불균형에 관한 연구. 「금융공학연구」, 11(2): 119-146.
-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논집」, 33(3): 89-127.
- Audretsch, D. B. & Thurik, R. (2001). Linking entrepreneurship to growth.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doi 10.1787/736170038056.
- Buchanan, J. M & Yoon, Y. J. (2002). Globalization as frame by the two logics of trade. *Independent Review*, 6(3): 399-405.
- Cameron, D. R. (1978). The expansion of the public economy: A comparative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4): 1243-1261.
- Davenport, T. H. (2005). *Thinking for a Living: How to Get Better Performance and Results from Knowledge Worker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Dicken, P. (1992). *Global Shift: The Inter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Seco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riedman, T. L. (2005).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Farrar, Straus and Giroux.
- Griliches, Z. (1979). Issues in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oductivity growth. *Bell Journal of Economics*, 10(1):

92-116.

- Haass, R. N.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avigating the dangers of a tangled world. *Foreign Affairs*, 77(3): 2-6.
- McGrew, A. (1992). Conceptualizing global politics. In A. McGrew, P. G. Lewis, et al. (eds.), *Global Politics: Globalization and the Nation-State*. New York: Polity Press. 1-28.
- Nolan, B. & Whelan, C. (1996). *Resources, Deprivation and Poverty*. Clarendon Press.
- OECD (2007).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 Peters, T. & Waterman, Jr., R. H. (1984). *In Search of Excellence*. Warner.
- Potter, D. (1992). The autonomy of third world states within the global economy. In A. G. McGrew & P. G. Lewis (ed.). *Global Politics: Globalization and the Nation-State*. London: Polity Press. 216-232.
- Rodrik, D. (1998).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5): 997-1032.
- Rowntree, B. S. (1901).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 Ruggles, P. (1990). *Drawing the Line; Alternative Poverty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Saunders, P. (2004). Towards a Credible Poverty Framework: From Income Poverty to Deprivation. *SPRC Discussion Paper No. 131*. SPRC.
- Schulze Buschoff, K. & Schmidt, C. (2009). Adapting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to the needs of the 'new self-employed' - comparing the UK, Germany and the Netherland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2): 147-159.
- Schumpeter, J.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 Tissen, R., Anderiessen, D., & Deprez, F. L. (1998). *Value-based Knowledge Management*. Amsterdam: Longman.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Harmondsworth: Penguin.
- Veit-Wilson, J. (1998). *Setting Adequacy Standards: How Government Define Minimum incomes*. The Policy Press.

□□□□□■□□□ Abstract

A Study on Entrepreneurial Policy Solving New Poverty Problems

Lee, Ju Heon
Yonsei University

Recently, in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the new poverty problem and the working poor problem create tremendous social turmoi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solution, so called, "entrepreneurial policy," to those problems after examining issues and identifying causes. The reasons why entrepreneurship receives so much attention these days are that employment opportunities have been reduced dramatically and entrepreneurship is a seed for innovation, which can lead to jobs and economic growth. In this article, our suggestion as desirable entrepreneurial policy is, by providing supports and growth opportunities to the disadvantaged people and firms, increasing innovation capabilities in society and pursu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Key Words: New Poverty, Entrepreneurial Policy, innovation Capabilities]

논문접수일: 2013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 2013년 5월 19일

제1저자: 이주헌 (Lee, Joo Heon)
소속 및 직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주소: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정의관
전화번호: (033)760-2317
이메일: dardenlee@yonsei.ac.kr